

학폭 가해 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 때까지 보존한다

당정협의, 피해학생 지원·교권 보호·가해자 즉시 분리 등 논의 학폭대책위서 최종 계획 확정·발표... 행정심판 등 관련 입법도 추진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게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면서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역물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

일시 _ 2023. 4. 5.(수) 08:00 장소 _ 국회 본관 228호



이주호(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중증응급의료센터 60곳으로...응급실 뱅뱅이 없앤다

당정, 소아과 진료환경 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응급실 뱅뱅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무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의료진의 안전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소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집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김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 김모(6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김모(3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 일간 숨여 지내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차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우고 이동시킨 뒤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올해 1월18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인 김씨는 11월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경기 화성시로 이동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차를 갈아타며 경기 오산시 등을 거쳐 같은 날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후배 김씨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후배 김씨는 친구 김씨의 지시를 받아 김 회장을 자기 집에 이틀간 묵게 하고,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차해 김 회장을 숨긴 뒤 휴대전화와 생필품 등을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은 12월29일 이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친구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인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 후배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정순신 부실검증’ 국민께 죄송”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국민 눈높이에 부족, 책임감 느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점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 그 점은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순천·함평 ‘특별재난지역’ 추진

산불 피해 전국 10곳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전남 등의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 도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